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197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2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구자근 · 최춘식
노용호 · 태영호 · 지성호
김도읍 · 조수진 · 임이자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(이하 “농어가”라 함)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, 가뭄 · 홍수 · 태풍 · 해일 ·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농업재해나 어업재해(이하 “농어업재해”라 함)를 입은 농어가에 그 피해 사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,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현행법에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이나 「풍수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금 수령 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,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· 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(이하 “재해보험금”이라 함)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, 비료대, 농약대, 입식비,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(이하 “재해복구비”라 함)를 지원받을 수 없음.

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험금은 최소한 생계구호를 위한 재해복구비보다 많아야 함에도, 최근 재해복구비의 지원 규모 확대로 재해복구비가 재해보험금보다 높을 수 있어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함께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이나 「풍수해보험법」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,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단서).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”을 “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풍수해보험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”으로, “제외한다”를 “제외하되,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, 피해의 경감,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| 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풍수해보험법」, 「재난 및 <u>안전관리 기본법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제외하되, 이 법에 따른 지 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 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 원할 수 있다. |
| ② ~ ⑧ (생략) |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|